

사법리스크에 설화, 정책·공약보단 네거티브...

## “뺨을 사람이 없다”... 20대 대통령선거 ‘역대급 비호감’

이재명, 호감 37% 비호감 60%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

윤석열, 호감 40% 비호감 56%  
전두환 옹호 발언 등 구설 돌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양강 구도를 이룬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뺨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윤석열 후보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중 가장 늦은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 속에 대선 초반 기세를 잡는 모양새지만,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일 공개한 5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의 호감도는 36.8%인데 반해, 비호감도는 59.5%로, 윤 후보는 40.1%의 호감과 56.1%의 비호감의 결과를 보였다.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은 24.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KBS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양강 구도를 이룬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뺨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뉴스1

이같은 현상에 대해 우선 두 후보 모두 본인 또는 가족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를 꼽는다.

이 후보에게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윤 후보는 본인과 가족에게 의혹이 집중되어 있다. 윤 후보에게는 최근 입건된 판사사찰을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등 4건과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등이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상황이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정치권 안팎에서 후보교체설도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후보교체설이지만,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

로 접어드는 2월 초 전 기소로 인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후보가 잦은 설화에 휩싸이는 것도 비호감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형수 욕설 논란을 시작으로 최근 웹툰 ‘오피스 누나 이야기’ 발언 등 돌발발언으로 논란을 불렀다. 이 후보가 야당 시절부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가감 없이 밝히며 ‘사이다’라는 별명을 받았지만, 여당 후보가 되면서 정제되지 않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7일부터 언론의 백브리핑에 응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며 후보 수혜 측과 백브리핑을 원하는 기자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윤 후보의 구설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부터 계속됐다. ‘전두환 옹호 발언’에



중앙정치와 연을 이어갔고, ‘이재명은 합니까’라는 이미지도 이때부터 만들어진 반면, 윤 후보는 27년간 검사로 공직 생활을 하며 검찰총장 퇴임 직후 정치에 입문해 4개월 만에 대선 후보로 확정되며 사실상 새내기 정치인이다.

현재 여대야소 21대 국회에서 이 후보는 원내 과반 이상인 민주당을 등에 업고 초기부터 국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윤 후보의 경우에는 여당과 주고받는 협상 때문에 자칫 국정 초기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많은 듯 다른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대선 국면에 대해 “후보들의 리스크가 대표적으로 대장동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인데 분명히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민이 볼 때 대장동의혹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라 자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인식하지만, 고발사주 의혹은 직접 관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이는 심각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 봤듯이 이슈보다는 네거티브로 대선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며 “대장동 이슈나 고발사주 이슈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공수처를 포함해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결과가 달라지는 꽃놀이패를 쥐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국힘 선대위 ‘매머드 원팀’ vs ‘전면 재구성’

(윤석열)

(김종인)

김종인 “자리사냥꾼 잘 선별해야”  
윤석열 “우리당 전체가 하나돼야”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매머드급 원팀 선대위’를 구상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캠프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선대위 재구성’을 요구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간극이 좁혀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전 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선대위에서 한 자리를 노려 뒷날을 도모하는 자들을 ‘자리사냥꾼’, ‘하이에나’ 등으로 표현하며 기존 캠프가 그대로 선대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윤 후보 측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 않았으며 실무자 중심의 선대위 출범과 조직 확장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신동아 창간 90주년 특별기획 ‘김종인-진중권’ 특별대담에서 윤 후보가 민심을 반영하는 본경선 일반국민조사 투표에서 홍준표 의원에 약 11%포인트 차로 뒤진 것을 언급하며 캠프 해체 수준의 선대위 인적 구성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캠프의 총괄 선대위위원장을 맡으려면, 선거를 책임지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지난 경선과정에서 홍의원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국민여론조사에서 진 것에 대해 윤 후보가 직시하고 스스로 인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캠프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 우후죽순 격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리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잘 선별하지 못하면 후보 당선과 대통령이 된 후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구상과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구상과 관련 “기존(캠프) 멤버들에다 더 진영도 넓히고 다른 후보 캠프 분들도 영입하고 우리 당 전체가 하나가 돼 큰 선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낸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의 입장차를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의 좋은 감정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김종인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 복잡한 선결조건들을 많이 제시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윤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캠프 익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대선 콘셉트를 조직선거로 잡고 수백만장 임명장을 뿌리겠다는 발상을 이제 대놓고 익명 인터뷰로 들이밀기 시작한다”며 “그냥 할 말이 없다. 어떻게든 하겠다는 건지 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 전 비대위원장과 오찬을 가지고 선대위 구상에 대해 논의한 권성동 윤석열 캠프 비서실장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캠프에서 선대위 구성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있고, 어느 정도 구상이 맞춰져야 김 전 위원장과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文 “외교역량 총동원 요소수 공급 총력”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디젤 기관 차량에 필수인 ‘요소수’ 공급 불안정 상황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뒤늦은 대응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여유분 우선 활용’,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을 지시한 게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지적되는 만큼 요소수 공급 불안정에 대한 정부 책임론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요소수 공급 불안정 상황에 대해 “시급한 현안”이라고 규정된 뒤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요소수 공급 불안정 상황을 고려한 듯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 대비도 당부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